한일불교 "전쟁·기후위기 극복 앞장"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인류공영 기여' 공동선언 발표

교류 40년 역사 의미 되짚으며
세계평화·불법홍포 노력키로
원론적인 수준 선언은 '아쉬움'
일본 측 참여 저조도 해결과제

전주=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공동선언문 서명 후 서로 교환한 한일불교협 사무총장 향운 스님(사진 왼쪽)과 일본불교협 사무차장 카가와 호유 스님.

지난 46년간 40차례에 걸쳐 매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교류해온 양국 불교계가 기아와 전쟁, 기후위기 등 인류가 직면한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대안을 모색할 것을 천명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진우)와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는 6월 13일 금산사에서 봉행한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이어 전주 라한호텔로 자리를 옮겨 학술강연회 및 공동선언문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양국 사무총장 명의로 합의한 공동선언문에는 △한일 불교도의 친선 교류가 세계평화에 기초가 됨을 재확인 △생명 존중과 정신의 가치를 존중해 위기에 처한 인류와 지구에 희망이 되도록 노력 △인류가 처한 현안을 직시해 불법에서 대안을 찾고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실천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40차 대회를 계기로 시대 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양국 교류 모색과 함께 상호 연대로 지혜를 모아 사회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불교도가 되기 위해 정진하고자 서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언문의 내용처럼 전쟁과 기후위기 등 인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국 불교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전개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1977년 1차 대회 당시 서로 유학생을 보내 교류하자거나 36차 대회서 청소년 교류사업의 이행을 결의한 것에 비하면 적극성이 떨어졌다.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일본 측의 참여가 저조해진 것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대회에는 일본 측에서 총 37명이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2명을 제외한 35명이 참가했다. 한국 측에서 150명의 인원이 대회에 힘을 보탠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 인해 과거 한국 측 회의에선 일본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일본 측 회장인 후지타 류조 스님이 이를 인식한 듯 환영만찬 전 차담에서 갑자기 "매년 일본 참가자가 줄어 한국 측의 우려가 있지만 더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후지타 류조 스님은 또 "이번 참가자들이 정예 멤버다. 일당백을 소화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이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각 종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반면, 일한불교교류협의회는 종단이 아닌 개인회원 자격으로 참가하면서 생긴 차이로 보인다. 양국의 현실은 차치하더라도 한일불교계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위해선 일본 측이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와 함께 공동선언문 발표에 앞서 진행된 학술강연회서는 한국 측에서 가장 오랫동안 구성원으로 활동한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이 '한일 불교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라는 주제로 연설을 맡았다. 스님은 한일 불교 40년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실로 30차 대회 당시 양국 불교계가 신륵사에 공동으로 세운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꼽았다.

인류화합공생기원비는 지난 2009년 당시 양국 불교협의회 회장이었던 지관 스님과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김문수 경기지사, 이기수 여주군수, 신륵사 주지 세영 스님 등 500여 명이 함께 건립한 것으로, 일제가 한국에 끼친 피해와 고통에 반성하고 참회한다는 글귀를 새겨 세간에 화제가 됐다.

홍파 스님은 "30차 대회에서 제가 밝힌 '희망을 잃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형제처럼 살아가자'는 얘기를 현재도 되새겨야 한다"며 "당시 제안한 '대승불교의 육바라밀 실행'은 지금의 세계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묘방"이라고 강조했다.

강연회 일본 대표로는 노자와 류우코 스님이 글을 썼다. 다만 스님은 세수로 93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이번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스님의 글은 다른 참가자가 대독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해당 참가자도 개인적 사정으로 대회에 불참하면서 묵독하는 시간으로 대신했다.

"대구시 종교자문위 폐지…종교갈등 우려"

선광·도심 스님, 6월 14일 대구시의회 항의 방문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광 스님과 종교평화위원장 도심 스님이 6월 14일 대구시의회를 방문,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존치와 조례 일부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계종 측의 요구에 김재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심사숙고하겠다"는 짧은 답변만을 남겨 불교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도심 스님은 종교자문위 존치가 "종교간 화합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심 스님은 "전국지자체 중 대구시에만 유일하게 종교편향 공연과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고, 2021년 신설된 종교자문위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종교화합을 위한 대구시의 긍정적 노력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자문위원회 신설 이후 종교편향 논란이 줄어든 공연이 그 성과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자문위를 폐지한다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선광 스님도 "종교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자문위가 1년 반이라는 짧은 시점에서 베토벤 교향곡 논란으로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제도를 만들기까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없애는 것은 향후 종교간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우 문화복지위원장이 "자문위가 폐지되면 논란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냐"고 묻자 선광 스님은 "당연하다"면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대구는 특정종교 찬양이 담긴 노래 구성이 상당히 많았고 지난 2021년에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공연에서 그런 논란이 있어 이런 부분이 제도화된 것"이라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구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이에 김재우 위원장은 "심사숙고 해 진행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6월 20일 자문위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계종은 자문위 폐지에 항의하기 위해 홍준표 시장과 면담을 신청한 상태다. 정당한 이유없이 면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구시의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는 6월 12일 7차 회의를 갖고 특정종교 편향성이 짙은 합창곡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린 종교자문위를 폐지하는 대구시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강경한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임은호 기자

본지·거인병원, 불자 건강 증진 돕는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서 MOU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 하는 본지 대표 혜도 스님(사진 오른쪽)과 이숙희 사무국장.

현대불교신문(대표 혜도)과 부산 정형외과 중점병원 거인병원(대표원장 이승준)이 국민과 불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본지와 거인병원은 6월 12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환자 편의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특히 본지 독자들은 거인병원 시설 이용 시 건강보험 적용 환자에 한해 비급여 진료 부문 할인 혜택을 받는다. 이용 희망자는 거인병원에서 접수 시 현대불교신문 독자임을 밝히면 할인 가능하다. 할인대상은 본지 독자와 직원, 직원 직계 가족이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본지 독자들의 건강 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업무 협약을 통해 현대불교신문은 거인병원 진료 및 활동을 홍보한다. 부산 사직동에 위치한 거인병원은 지난해 11월 개원한 정형외과 중점병원이다. 지하 2층에 지상 10층, 총 103개 병상을 갖춘 복합의료시설이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내과 등을 진료하며 관절 및 척추, 스포츠 의학을 전문으로 담당한다. 의료진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대학병원 교수 출신으로 구성됐다.

본지 대표 혜도 스님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해야 수행도 잘 할 수 있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이 혜택을 받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숙희 거인병원 사무국장은 "이 인연으로 한마음선원 불자들과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이 건강해지길 바란다"며 "병원을 찾는 모든 불자들이 건강하실 수 있도록 병원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전통사찰 종부세, 지역공동체 파괴 야기"

이상근 회계사, 6월 12일 국회정각회 토론회서

낮은 임대료 사찰 보유 주택
수익용 평가 후 종부세 부과
임대료 상승, 주민 피해 따라

경북 안동 서악사의 사촌(寺村)은 6.25한국전쟁 이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들어 조성된 곳이다. 전쟁으로 갈 곳이 없어졌던 사람들에게 서악사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를 책정해 토지와 주택을 제공했고,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모여 들어 지금의 사하촌이 형성됐다.

70년 동안 사찰과 주민이 공생하며 살아왔던 관계가 수년 전부터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때문이다. 부자들을 잡겠다고 부과한 종부세가 서악사 2021년 기준 예년보다 10배가량 올랐다. 결국 서악사는 재원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지역 취약계층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

이처럼 전통사찰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종부세가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6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통사찰 종부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근 일신회계법인 회계사는 전통사찰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종부세에 대한 문제점을 성토했다.

이 회계사에 따르면 2022년도에는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종부세 부담이 감소했지만, 2020년 이전과 비교하거나 해당 부동산 수익금에 비교하면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토지, 주택분 종부세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 회계사는 "전통사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부담이 증가하면 사찰은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인근주민이나 농민의 부담으로 연결돼 지역공동체의 불화와 분쟁을 야기할 수 밖에 없어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회계사는 전통사찰에 대한 종부세 개정방안으로 △전통사찰 소유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 배제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조세 감면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는 합산에 배제되는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기에 주택분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회계사는 "전통사찰 소유 주택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향교처럼 '전통사찰 소유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에 배제토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은 불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종부세 정책 변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 과장은 "조세지원 범위가 전통사찰보존지로 넓어졌음에도 각종 세법에 경내지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